**주간통일정세 2010-08**(2010.02.15~02.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08

##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Ⅰ.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北 노동당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2.3發表)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2.13 김일성광장에서 진행(2/13, 조선중앙방송)
  - 최태복·김중린(黨비서),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곽범기(내각부총리), 최영림(평양시당 책임비서/보고), 장인수(평양시당 비서/사회) 등 참가

- 김정일 생일(2/16) 경축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경축보고), 전병호, 김영춘, 이영무, 오극렬, 이용호, 김정각, 김일철, 최태복, 김국해, 김중린, 김기남, 양형섭, 최영림, 김영대(사회민주당 위원장), 유효명(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이기석(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최은복(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간의 적대관계 종식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
  - "자주·평화·친선의 기치 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힘.

- 노동신문, 김정일 생일 사설, "절대 믿고 따르라"(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군조선의 광명한 앞길을 밝히는 태양"이라고 찬양하면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인 이날 '당의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하여 인민의 이상이 꽃피는 미래에로 신심 드높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수령 결사옹위는 민족번영의 생명선"이라면서 "전체 인민군 장병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께서 이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와 안녕을 모든 사업과 생활의 첫 자리에 놓고 삶의 순간순간을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며 '절대적 충성'을 독려
  - 이어 김정일 위원장의 왕성한 공개활동을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 걸음 백 걸음으로 내달리는 비약의 정신"이라면서 "우리의 발걸

음은 장군님의 강행군 보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분발을 요구

○ 北, 이름에 '정은' 못써…김정은 우상화 신호?(2/17, 자유북한방송)
- 북한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은과 이름이 같은 주민들에게 '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
- '함경남도 단천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해 "각 급 당위원회와 보안서, 주민등록기관들이 '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개명을 지시하고 있다"면서 "단천에서도 이름이 '정은'인 주민 20~30명이 개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1974년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됐을 때도 1~2년 후 동일한 주민 이름의 일제 개명을 추진, 성과 이름이 똑같은 경우는 물론 성이 다른 '정일'이라는 이름까지 모두 바꾸도록 함.

○ 北김정일, 보위부 공연 관람…후계 선봉 힘싣기?(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첩과 주민 사찰을 주업무로 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의 예술선전 공연을 관람해 주목
- 김 위원장이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국방위 위원 겸직)의 수행을 받으며 인민군 제10215군부대(보위부의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작년 4월 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을 처음 관람했고 이번이 두번째

○ 공동구호 관철 도(道)군중대회(2/21, 조선중앙통신)
- 당창건 65주년에 즈음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도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보도
- 군중대회에는 지방 당·정권·경제기관·근로단체의 책임일꾼, 각 계층 근로자, 청년학생이 참가

○ 北강능수 전 문화상, 노동당 부장 임명(2/21, 조선중앙통신)
- 지난달 중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강능수 전 문화상이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21일 확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보안성협주단의 첫 공연 관람을 수행한 인물을 거명하면서 "부장들인 김경희, 장성택, 강능수를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라고 밝힘.
-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달 1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안동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장을 문화상에 임명했다며 강 전임 장관에 대해 "다른 직무에 조동(이동)됨에 따라 문화상에서 해임했다"고만 전함.

■ **김정일동향**

- 2/15, 은하수관현악단의 설명절음악회 관람(2/15,조선중앙통신)
  - 김영춘(인민무력부장/차수),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 리영호(총참모장/대장),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부장), 강석주(외무성 제1부상) 등과 함께 관람
- 2/17, 공훈국가합창단 및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2/17,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軍 차수), 김정각·이영호(軍 대장들), 우동측(국방위원회 위원), 최태복·김기남(黨 비서들),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 부장들) 등 동행
- 2/18,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및 「감사」전달(2/18, 조선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관람시(2/17 보도) 동행한 軍·黨 주요 간부들 동행
- 2/20, 황해북도 송림시 소재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2/20,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 당 제1부부장이 동행

■ **기타동향 (대내 정치)**

- 김정일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2.11 백계룡(강원도당책) 참가下 원산유리병공장·구두공장·화학공장·농업종합대학에서 진행(2/12, 조선중앙방송)
- 2.8비날론연합기업소, 2.12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종업원 궐기모임 진행 및 김정일이 보낸 '특별감사와 선물' 전달(2/13,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김영춘·김기남, 2.15 在日조선인예술단과 평양대극장에서 담화(2/15, 조선중앙통신)
- 北원동연, 최근 中서 외자유치 활동(2/1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통인 원동연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베이징(北京)을 방문,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외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나. 경제 관련

○ 北식량난 심각…"아사자발생, 급속히 전역 확산"(2/16, 좋은벗들)

-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지난달 중순 이후 아사자 발생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좋은벗들'은 16일 소식지에서 북한 중앙당 간부의 말은 인용,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사자 발생이) 함경남도 단천, 함경북도 청진, 평안북도 신의주 순으로 많았는데 현재는 평안남도 평성과 순천이 가

장 많고 함경남도 함흥·단천, 함경북도 청진 순"이라면서 "1월 중순 이후 아사자 발생이 전역으로 퍼지면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함.

- 소식지는 또 평안남도 평성시 간부의 전언이라면서 "국가조치(화폐교환) 이후 새 화폐를 많이 풀어준 농민들은 그런대로 생활을 유지해가는 반면 도시 노동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서 "화폐교환 이후 시장을 전격 철폐하고 상품공급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도 공급도 끊기자 도시 노동자들이 굶어죽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이어 "특히 평안남도 평성시의 경우 작년 6월 도매시장 철폐 이후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다시 화폐교환이 이뤄져, 장사에 의존해 살던 노동자들이 주로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평성시당과 순천시당은 작년 농작물 수확량 가운데 약 65%를 군량미로 거둬들이고 농민에게는 평균 5개월 분량만 배분해 식량부족이 심한 것"이라고 말함.

○ 北-中 세관 업무 재개…교역은 한산(2/1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문을 닫았던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세관이 18일 업무를 재개, 교역은 많지 않았음.
- 이 소식통은 "이날 북한에서 들어온 차량은 3대에 불과했다"며 "북한이 화폐 개혁 이후 통제했던 장마당을 다시 허용했다는 말이 들리지만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임.
- 또 다른 대북 무역상은 "세관 업무가 재개됐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춘제 연휴가 끝나지 않아 교역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북한 당국이 무역과 시장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다음주나 돼야 교역이 회복되고 북한의 새해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에야 북·중간 교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함.

○ 평양에 전문술집 처음 등장(2/18, 조선신보)

- 올해 들어 평양시에 술과 안주만 판매하는 전문술집들이 처음 등장해 애주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평양 고려호텔과 연결되는 중구역의 창광음식점거리에 '봄빛술집', '금강술집' 2곳이 문을 열었고, 서성구역의 유명한 대중식당 '연못관'은 최근 전문술집으로 업종을 바꿨으며, 모두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서 운영한다고 보도

○ 다급해진 北, 시장 열고 식량거래 단속말라(2/18, 좋은벗들)

-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시장을 무조건 종전처럼 열고 시장내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도록 공안기관에 지시했다고

'좋은벗들'이 18일 보도

- "당 중앙위원회가 당 경제정책검열부에서 올린 전국 각지의 식량난과 주민실태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식량에 대한 단속을 절대 하지 말데 대한 지시'를 각 법기관에 통지했다"면서 "중앙공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모든 시장을 이유없이 종전대로 열고 식량거래는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힘.
- "인민보안성도 당 중앙위의 지시를 받아 각 도·시·군 보안당국에 위법품 외에는 시장 단속을 하지 말되 특히 식량 거래는 단속하면 안된다고 특별지시를 내렸다"며 "아울러 보안원은 시장에서 장사꾼과 말다툼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는 안되고 장사꾼끼리 싸우더라도 개입하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지침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임.

■ **기타동향 (대내 경제)**

- 평양시, 관리사업을 종합조종실에서 원격조종하는 '가로등중앙조종체계' 수립(2/12, 조선중앙통신)
-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종합식료공장(20여개의 생산공정으로 400여개의 식료품 생산), 함북 청진시의 수성천종합식료공장합 신설 등 각지에서 식료공장 건설과 상업망 개건사업 활발히 추진中(2/13, 조선신보)
- 北, 외자 100억달러 유치..내달 평양서 조인식(2/15, 연합뉴스)
  - 대풍그룹에 정통한 소식통 밝혀..北 GDP 70% 육박 '초대형' 외자 유치 성사
  - 왕자루이 방북시 조율..6자회담 복귀 빨라질듯
- 낙원기계연합기업소(平北 신의주시 소재) 제작 대형산소분리기, 2.16 咸南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 도착(2/16, 조선중앙방송)
- 북한, 100억달러 규모 외자 유치(2/16, 국민일보)
  - 사실일땐, '6자' 조건인 선 제재 해제와 같은 효과
  - 中, 적극적 역할 힘입어 곳곳서 복귀 신호 감지
- 권력기구도 개편(2/18, 매일경제,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 통일부 권력기구도 발간 '노동당 전문부서 21개⇒18개'
  - 복원된 노동당 경공업부장/南국보법철폐 대책위 폐지/북 군부 '대남통' 김영철, 공작 총책으로, 대남 경협기구 '민경협' 건재
- 현대적으로 개건된 「향산호텔」(묘향산內) 준공식, 2.17 김영춘·김정각·이영호·최태복(준공사)·김기남 등 참가下 현지진행(2/18, 조선중앙통신)
- 미곡협동농장(黃北 사리원시)·동봉협동농장(咸南 함주군) 등 사회주의이상촌 건설, 양어장과 닭공장건설, 농촌의 메탄가스화 등 김정일의 농업부문 업적 칭송(2/18, 조선중앙통신)
- 강계편직공장·강계포도술공장 등 慈江道內 수많은 공장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경제강국건설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전(2/18, 조선중앙통신)
- 北국가개발은행, 자본금 100억달러 목표(2/18, 월간중앙)
  - 대풍그룹 설립제안서 공개…향후 1천250억달러로 증자, 올해 하반기 '경제개발 국제세미나' 평양개최 계획

## 다. 군사 관련

- 北 잇단 '화력 과시'…작년초 훈련장면도 공개(2/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다큐멘터리 '위대한 헌신-변이 난 해 2009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공개활동 행보를 상세히 전함.
  - 약 1시간 분량의 이 프로그램 후반부에는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대의 장사정포와 로켓포가 시커먼 포연 속에서 불꽃을 내며 포탄을 연사하는 장면을 30초 가량 보여줌.
  - 이 영상은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수행자 면면을 볼 때 작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포병사령부 산하 제681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상황으로 추정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장면을 비중있게 편집하는 것은 드문 사례

## 라. 사회·문화 관련

- 일부 北주민 '시민기자'로 활약(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일부 북한주민들이 작년부터 '시민기자(citizen reporter)'로 변신해 북한의 내부소식을 외부로 알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CPJ는 최근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기자로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북한 내부 상황을 나름대로 취재해 관련 정보를 일본 혹은 한국 언론사에 전달하는 북한인들이 북한 사회에 등장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독일 등 23개국에 탈북자 2천여명 정착(2/18, 자유아시아방송(RFA))
  -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한국 이외의 '제3국'이 전세계 23개국에 달하고, 그 숫자도 2천명 이상이라고 보도
  - 방송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를 인용,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정치적 망명 등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힘.
  -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유럽인데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10개국에 탈북자들을 받아들임.
  - 독일에는 가장 많은 1천390명이 정착했고 영국은 1천여명, 기타 국가들은 10~40명이며, 미국에서는 2006년 이후 총 93명이, 캐나다에서는 2000년 이후 77명이 난민으로 인정함.
  -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예멘 등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만8천여명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서 가장 일반적인 주택은 '62㎡ 투룸연립'(2/19, 연합뉴스)

- 북한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방 두 칸의 50㎡(15평)~75㎡(23평) 연립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32평) 이상 주택은 전체의 1.9%, 방 4개 이상은 1.1%에 불과
- 19일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 588만7천471가구 중 43.9%인 258만4천435가구가 연립주택이고 다음은 단독주택 198만8천415가구(33.8%), 아파트 126만1천709가구(21.4%) 순
- 농촌에서는 전체 230만7천845가구 중 단독주택이 59.4%(137만1천460가구)였지만, 도시에서는 357만9천626가구 중 49.5%(177만3천414가구)가 연립주택, 32.5%(116만4천767가구)가 아파트
- 특히 평양시의 경우 81만3천769가구 중 54.6%인 44만4천672가구가 아파트였으며, 크기에서는 73.5%인 432만5천378가구가 50㎡(15평)~75㎡(23평)이었고, 100㎡(32평) 이상은 1.9%(11만2천781가구)에 불과
- 방수는 2개인 경우가 64.7%(380만8천956가구)였고, 4개 이상은 1.1%(6만1천832가구)에 그쳤으며,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343만4천306가구(58.33%)였고 나머지는 재래식이나 공용화장실이었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비율은 농촌에서 특히 높아 전체 230만7천845가구 중 51.4%(118만6천722가구)나 됨.
- 석탄과 나무로 난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도시의 357만9천626만가구 중 64.3%(230만395가구)가 석탄을, 농촌의 230만7천845가구 중 75.3%(173만8천283가구)가 나무를 사용

■ **기타동향 (대내 사회·문화)**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5일 평양대극장에서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인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을 만나 환담(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이 배석
- 영국문화원-북 합작, 김일성대 등 랭귀지 코스 개설(2/16, 국민일보)
- 북·중·러 접경지대 진도 6.7 강진(2/19,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 北매체, 조동섭 축구 코치 띄우기(2/21, 우리민족끼리)
  - 오는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올초 카타르 4개국 초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이끈 북한 축구대표팀의 조동섭 코치를 '능력있는 감독'으로 치켜세움.
- 북한 간 '옛 은반황제' 야구딘(2/21,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1일 "최근 열린 백두산상 국제피겨축전에 국제 피겨계에서 이목을 모은 국내외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다"며 "평양 시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인물은 남자 피겨 명수인 러시아 야구딘"이었다고 보도

·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백두산상 피겨축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 러시아,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

### 마. 6자회담(북핵)동향

○ 美외교정책협의회, 김계관 방미 추진(2/19, 미국의 소리(VOA))
- 과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 대화채널이 됐던 미국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3월 초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NCAFP가 다음달 3일과 4일 뉴욕에서 김계관 부상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북한측의 최종 결정과 미국 정부의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함.
- VOA는 "김 부상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려면 방미했을 때 미 관리와 양자 접촉 여부가 사전 정리돼야 한다"면서 "아직 미 국무부가 김 부상과 양자접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 김 부상도 미 관리와 면담이 보장되지 않으면 뉴욕에 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함.
- 한편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18일(한국시간) 현 시점에서 북한과 추가 대화 계획은 없으며, 김계관 부상의 다음달 방미추진설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함.

## 2. 대외정세

○ 北 김영남, 대화·협상으로 북미 적대관계 종식(2/15,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 높이 나라들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남북관계와 관련,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추종하고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

○ 北, 駐中 대사에 국장급 첫 내정(2/16, 연합뉴스)
- 북한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해 오던 60년간의

관행을 깨고 신임 대사에 국장급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짐.
-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가 10년 만에 교체되고 후임에 최병렬 외무성 영사국장이 부임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이 이달초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한 만큼 이달 말 또는 3월께 부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함.

○ 北, 민간외교 수장에 김정숙 임명(2/1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민간외교를 전담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허담 전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부인이자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책임주필인 김정숙(80)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주북 이란 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회 생일을 맞아 18일 마련한 연회의 참석 인사를 전하면서 김정숙의 직함을 대외문화연락위원장으로 소개
- 외무성과 함께 북한의 양대 외교기관인 대외문화연락위는 노동당 국제부의 지휘를 받아 비수교국의 정부나 민간인을 상대로 외교활동

■ 기타동향 (대외)

- 인도공산당 전국이사회 총비서, 2.5 自國駐在 北 림회성 대사 접견(2/12, 조선중앙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2.13 중통 기자회견을 통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訪中기간(2.9~13) "조-중관계, 평화협정체결, 제재해제, 6자회담재개 등 조선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 토의" 언급(2/13, 조선중앙통신)
- 이란 대통령, 2.10 自國駐在 北대사 서세평 접견(2/15, 조선중앙방송)
- 서재명 멕시코 駐在 北대사, 2.10 駐在國 인민사회당 중앙委 총비서 작별방문(2/18, 조선중앙통신)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멕시코 北 대사에 '안근성' 임명(2/18, 조선중앙통신)

## 3. 대남정세

○ 北, 군사실무회담 제의에 9일째 '묵묵부답'(2/21, 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23일 개성공단의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는 남측 제의에 대해 9일째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동·서해상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군은 설명

○ 北신문, 北인권법에 대가 치를 것(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1일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값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힘.
- ‘대결광신자들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진지한 노력에 호응해 나설 대신 오히려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못된 짓만 골라가며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인권법을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며 “신성한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의 값높은 존엄과 인권을 함부로 걸고 들며 모독하는 대결광신자들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

■ 기타동향 (대남)

– 북, NLL인근 방사포 전진배치(2/20, 중앙일보 등)
  · 사거리 60Km 240mm포 수십문, 서해 8곳 사격구역 지정

북한연구센터 제공

# Ⅱ.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보즈워스, 내달 중 중국 방문 고려”(2/20)**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마도 내달에” 중국을 방문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미 정부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 20일 전했음. 미국 측은 조만간 방중을 위한 세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음. 보즈워스 대표의 방중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의 미국과 중국 간 접촉이 이뤄지게 됨.
- 미국 측은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접촉한 중국 측으로부터 북한 입장을 전해 듣고 이를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음. 미국 측은 또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 등으로 유발된 중국과 긴장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보즈워스 대표는 방중 후에 일본과 한국도 방문해 북핵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음.

**“유엔 고위관리 추가 방북 예정”(2/1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특사로 지난주 방북했던 린 패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유엔 기구 한두 곳의 고위급 관리들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음. 2004년 이후 방북한 유엔의 최고위급 관리인 패스코 특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몇 달 내에 추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패스코 특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김원수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 차장은 이번 방북의 목적은 고위급 대화를 재개시키는 것이었다며 반기문 총장의 방북 가능성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패스코 특사는 6자 회담이 전제 조건 없이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과 반 총장의 생각이라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유엔 제재에 대한 북한의 불쾌감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6자 회담 복귀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음.

**유외교 “6자회담 정황상 조만간 열릴 것”(2/1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열리긴 열릴 것”이라고 밝혔음.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을 통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중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6자 회담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유 장관은 이어 '6자회담 재개를 확신하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그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음.

- 유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10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중국 정부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100억 불이라는 막대한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유엔 제재와 맞지 않은 문제이고, 대북제재 완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투자유치는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음.
- 유 장관은 북한의 대(對) 중국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이라고 답변했음. 그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융통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북한을 야단쳐야지, 정부를 야단치면 (안된다)"고 반박했음.

## 나. 미·북 관계

### ○ 美 "중국서 북미접촉 없었다"(2/20)

- 미국 국무부는 19일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설 연휴 전 중국 방문 당시 북미간 접촉이 있었다는 일부 한국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비공식적인 만남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서 (북측과) 만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음. 그는 "북한 관리들과 만날 현재로서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음.
- 그는 이어 다음달 초 미국에서 열릴 학술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김 부상의 방미가 추진되고 있다는 다른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북한 관리들이 미국에 오거나, 미국 관리들이 그들을 만날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말했음.
- 워싱턴 소식통들은 북측이 김 부상의 민간단체 초청 형식을 통한 방미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전제돼야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기류라면서 설 연휴 직전 김 부상의 중국 방문을 통해 이뤄진 북·중간 협의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확약했는지 여부가 김 부상 방미 성사 여부의 관건이라고 설명했음.

### "美외교정책협의회, 김계관 방미 추진"<VOA>(2/19)

- 과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공식 대화채널이던 미국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3월 초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음. VOA는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NCAFP가 다음달 3일과 4일 뉴욕에서 김계관 부상이 참석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북한측의 최종 결정과 미국 정부의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음.
- 이 단체는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으로 6자회담이 중단되자 같은해 6월말 리근 국장 등을 뉴욕으로 초청해 학술회의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리 국장이 조셉 디트러니 미국 대북협상 대사와 접촉하고 나서 10여일 후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했음. 리 국장은 2004년 8월에도 이 단체 주최 세미나에 참석했음.
- 그러나 VOA는 "김 부상의 방문이 성사되려면 방미했을 때 미 관리와 양자 접촉 여부가 사전 정리돼야 한다"면서 "아직 미 국무부가 김 부상과 양자접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 김 부상도 미 관리와 면담이 보장되지 않으면 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음.
- 한편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18일(한국시간) 현 시점에서 북한과 추가 대화 계획은 없으며, 김계관 부상의 다음달 방미추진설과 관련해서도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음.

### 미국인 10명중 6명 "北군사력 美에 위협"(2/19)

- 미국의 조사기관인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북한의 군사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했음. 이 조사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힌 응답은 이란의 군사력이 중대 위협(61%)이라고 밝힌 응답과 함께 7개의 잠재적 위협 중 두 번째로 우려하는 위협요소임.
- 연령별로는 65세이상 노년층의 66%가 북한 군사력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대답한 반면 18~29세 응답자는 56%가 같은 대답을 해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음. 또 정치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자 67%, 민주당 지지자들은 63%가 각각 북한의 군사력이 중대 위협이 된다고 대답했고, 무당파 응답자들은 54%가 같은 대답을 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남녀 1천25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포인트임.

### 바이든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NPT강화 성과"(2/18)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도출돼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강화 노력의 성과라고 밝힘.

- 그는 "NPT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돼 있다"면서 NPT 강화를 위한 검증노력의 성과가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켜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또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면 미국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 조약에 제기됐던 검증에 대한 모든 우려가 해소됐다고 확신한다"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실험 없이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공감대가 정부 기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음.
-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핵무기를 조만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핵실험 없이 기존에 보유한 핵탄두의 성능을 유지하고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예산에 작년보다 6억2천400만달러가 늘어난 70억달러 배정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음.

### 美 "현시점서 北과 후속대화 계획 없다"(2/18)

- 미국 국무부는 17일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추가 대화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해 말 방북에 이은 북한과의 2차 대화를 계획 중인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at this point) 없다"고 말했음. 토너 부대변인은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다음 달 방미추진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답했음.

### 美 "中, 대북제재 지지 변하지 않을것"(2/17)

- 미국 국무부는 16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의 대형 은행 등을 통해 100억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외자를 유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보도를 봤지만, 그 같은 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음.
- 두기드 부대변인은 이어 '만일 중국이 북한의 100억달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거듭 관련 정보가 없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지금 적용중인 (대북) 제재를 지지해 왔으며, 이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 그는 또 "우리(미국)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길을 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꽤 적극적으로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런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북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개입(engage)할 방법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개입할 수 있다"고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음.
-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비핵화는 별

개의 문제라는 기본 입장도 확인했음. 그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문제가 되고 악화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음.

-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연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 정권 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불평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 그러나 이는 두 개의 별개 문제들"이라고 말했음.
- 그는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좀 더 폭넓은 관여가 있다면 자유로운 생각과 무역의 교환 및 북한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교류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체제와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는 보통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도우려는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하지만 그는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 라디오 날리기 운동 등에 대해 국무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전하면서 "그런 단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 북한 내부의 상황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음.

## 다. 중·북 관계

### ○ 北, 駐中 대사에 국장급 첫 내정(2/16)

- 북한이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해 오던 60년간의 관행을 깨고 신임 대사에 국장급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음. 베이징 소식통들은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가 10년 만에 교체되고 후임에 최병렬 외무성 영사국장이 부임할 예정"이라면서 "북한이 이달 초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한 만큼 이달 말 또는 3월께 부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음.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수교 이래 상대국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사로 파견해 왔으나 이번 인사로 그간의 관행이 깨졌음.
- 중국은 이와 무관하게 류샤오밍(劉曉明) 현 주북 대사 후임으로 차관급인 류훙차이(劉洪才)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음. 북한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사와 함께 공사도 한꺼번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음. 김성기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는 부상으로 승진, 이미 귀국했고 후임에는 중국통으로 알려진 박명호 외무상 중국담당 부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음.

### ○ 北원동연, 최근 中서 외자유치 활동(2/15)

- 북한의 대남통인 원동연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최근 베이징(北京)을 방문,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외자유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음. 한 소식통은 "원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중국 내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 통전부 과장 겸 아태평화위 실장에서 지난해 말 통전부 부부장 겸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진 원동연은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이사장을 맡은 김양건 아태평화위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적극 보좌하는 인물임. 원 부위원장은 김양건 아태평화위 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15일과 20일 베이징에서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 때문에 이 기간에 싱가포르에 들러 남측과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는 예비접촉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음.
- 원 부위원장은 지난 20여년간 남북간 주요 고위급 회담과 접촉에 빠짐없이 관여해온 대남분야 베테랑임.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겸한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할 정도로 이론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원 부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1990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 수행원으로 1차부터 7차 회담까지 참가했고 1992년 고위급회담 때는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나섰으며 1995년 7월 베이징 2차 쌀회담 때는 북측 대표를, 같은 해 9월 3차 쌀회담에서는 대변인을 맡았음.

### "北, 中의존 화폐개혁실패 돌파구 모색"(2/15)

- 북한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화폐개혁 실패로 혼란이 계속되자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사태를 돌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5일 보도했음.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8세 생일(16일)을 앞두고 혼란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화폐개혁 실패로 급격하게 악화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원조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임. 북한 지도부에서는 화폐개혁의 실패로 "경제목표 달성이 2, 3년 늦어지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 이와 관련,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해 10월 방북 시 약속한 대북 원조가 기대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따라 지난 9~13일 중국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임무 가운데는 조속한 원조 집행을 중국 측에 요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음.
- 한편, 최근 들어 김 부상의 3월 방미설이 제기되자 미국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중간의 조정이 진전돼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게 되면 (그의 방미)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음.

### "北, 외자 100억달러 유치..내달 평양서 조인식"(2/15)

- 북한이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연간 북한 GDP(미화 150억 달러)의 70%에 육박하는 초대형 외자 유치를 성사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先) 유엔제재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형 은행 두세 곳과 복수의 다국적기업이 대풍그룹과 대북 투자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면서 "3월 중순 평양 국가개발은행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질 계획인데 전체 투자 규모는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또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 때 대풍그룹을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면서 "내달 발표될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은 중국 자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중국 정부가 이번 대북 투자를 주도했음을 시사했음.
- 내달 발표될 북한 내 외자유치 사업은 평양~신의주 철도, 중국 투먼~라선특별시 철도, 평양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연관된 주택 건설, 항만 건설 등이며, 조인식 직후 프로젝트별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음.
- 북한은 이번 투자 조인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중국 등 투자 관련국 기자 수십 명을 내달 평양에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음. 또 지금까지 대풍그룹을 통한 투자 교섭이 물밑에서 이뤄진 것과 달리 3월부터는 신설될 대풍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입찰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소식통은 "대풍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을 직접 유치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뿐 아니라 투자계획을 확정지은 외국 기관이나 기업도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액의 투자유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음.
- 한편 북한은 지난 20일 최고 권력기관 국방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외투자유치 기관인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다고 발표 후 투자유치 창구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지정했음.

## 라. 일·북 관계

### 日공안위원장 "조총련계 고교 무상화 제외"(2/21)

-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문부과학성에 요청함.
-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재일 조총련계 학교를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 문부과학성이 검토에 들어갔음.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임.

-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와 교육 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어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불투명함. 현재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조총련계 학교는 모두 73개교이며 이 가운데 학비 무상화 대상 고교는 12개교임.
- 지난달 29일 각의가 의결한 고교무상화법안에 따르면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학교의 재학생에도 일본 사립학교와 같은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의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지급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4월까지 문부과학성이 결정하도록 했음. 가와바타 문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해 외국인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 日 당정, 북한인권법 개정 추진(2/17)

- 일본 정부와 민주당이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음.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국가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달 4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현행 북한인권법이 탈북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왜곡된 법안이 돼버렸다"고 지적한 뒤 "정부 각 성·청과 연대해 틀을 바꾸고 싶다"며 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했음.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중 탈북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고쳐 일반 난민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한다는 것임.
- 일본의 북한인권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탈북자의 일본 정착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본 정책 외에도 탈북자를 통해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 북한인권법은 2006년 외환법,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조치법과 함께 일본 정부의 북한 압박 카드로 제정됐음. 이 법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한 당국에 의한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국가(일본)의 책무'라고 명기하는 한편 대북 경제제재 발동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마. 러·북관계

### ○ 러시아 "무한정 대북 제재는 반대"(2/20)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9일 "북한에 대해 무한정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음. 네스테렌코 대변인

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음. 그는 이어 "대북 제재 목표는 경제적 고립이 아니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방문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전문가 그룹은 이날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교부 본부대사와 만나 대북 제재 이행 문제 등을 협의했음. 로그비노프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6자회담과 비핵화 프로세스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러시아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음. 제재 위원회는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각국의 제재 이행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아 전반적인 제재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있음.

### "北 관리, 러시아에 망명 요청"<교도통신>(2/15)

- 러시아에 불법 입국한 북한 관리가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15일 일본 교도통신이 러시아 정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지역을 통해 러시아로 밀입국했다 붙잡힌 북한 관리(남. 40)가 최근 러시아 정부와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러시아로의 망명을 요청했음.
- 지난해 11월 밀입국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금 시설에 수용중인 이 관리는 과거 북한 내 산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소속과 직책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밝혔음.
- 북한 당국은 체포 직후 러시아 측에 이 관리의 송환을 요구한 한 것으로 전해졌음. 그동안 북한 벌목공이나 탈북 건설 노동자들이 러시아 당국에 망명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북한 관리가 망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측 정보기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는 북한 주민의 망명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보도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음. 러시아 당국은 이 관리가 형을 마치고 난 뒤에야 망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 이민 당국은 북한 주민의 새로운 탈북 루트로 러시아가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불법적으로 월경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음. UNHCR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 탈북자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불법 입국자인 그가 북한에 송환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바. 기타

### "北붕괴시 中·러시아군, 北 공동점령 가능성"(2/19)

-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음. 그는 "이런 사태(북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발 장치 및 다른 무기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이와 관련,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그 지역(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런 공동 점령의 총연습을 제공할 수 있는 워게임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음.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직접 군을 동원하기보다 러시아군의 북한지역 점령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음.
-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산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군이 직접 나서거나 미군의 북쪽으로의 배치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대부분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일부 불안정을 수용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동반될 무질서보다는 현 상태를 대체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음.

### "독일 등 23개국에 탈북자 2천여명 정착"<RFA>(2/18)

-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한국 이외의 '제3국'이 전 세계 23개국에 달하고, 그 숫자도 2천명 이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음. 이 방송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를 인용, "199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에서 정치적 망명 등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음.
- 방송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유럽인데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10개국에 탈북자들을 받아들였음. 특히 독일에는 가장 많은 1천390명이 정착했고 영국은 1천여명, 기타 국가들은 10~40명이었음. 또 미국에서는 2006년 이후 총 93명이, 캐나다에서는 2000년

이후 77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음.

- 그밖에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예멘 등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만8천여명임.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한·미, 주한미군 해외차출절차 협의 연내완료(2/21)**

-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절차와 방식 등을 오는 10월 이전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을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합의한다는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해외 분쟁지역으로 차출될 때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고 어떤 채널에서 협의를 진행할지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면서 "차출되는 병력 수준과 이에 따른 보완전력 투입 문제도 주요 의제"라고 말했음.
- 특히 한국 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이 오산과 평택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소식통은 "양국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전략적 유연성 적용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미측은 2016년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한·미는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각각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미 2사단이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면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은 완료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시행될 것이란 관측임.
-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이전키로 했지만 양국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사도 지연되어 1년 늦출 수밖에 없다"면서 "2사단의 이전시기도 용산기지 이전과 맞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미측이 기지이전 예산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미측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음. 한·미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지이전 협상을 마친다는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 軍 "北위협대응 '지역MD' 미와 협의가능"(2/17)

- 군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지역차원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음. 군 고위 관계자는 17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MD체제 개념이 과거 글로벌차원에서 지역단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위협 대응을 전제로 하는 지역단위 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비록 지역단위 MD체제라고 하더라도 아직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 정식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양국 국방부 산하 또는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는 MD체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최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BMD)과 관련해 '한·미간에 초기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도 연구기관끼리의 의견 교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음.
- 군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차원의 MD체제에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관계, 천문학적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위협 대응에 국한하는 방어체계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나. 한·중 관계

### ○ 한·중·일 '안보대화' 연내 발족 추진(2/15)

- 정부 고위 소식통은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참가하는 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국방부 관리가, 일본은 방위성 관리가 각각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3국간에 정기적으로 군사·안보분야를 논의하게 될 이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음.
- 소식통은 "우리 국방부에서 이 협의체 개설과 관련한 임무를 전담하고 있다"면서 "될 수 있으면 연내에 발족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음.
- 정부 소식통은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정치·외교분야의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 경주 노력'에 합의한 뒤 3국간 안보대화체 신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음.
- 이 안보대화체가 가동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인도주의적인 단순한 해상수색·구조훈련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연합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

음. 한·미·일, 한·중·일, 한·미·중 등 3국간 공식, 비공식 3자 안보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미·중관계, 중·일관계의 안정화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다. 한·일 관계

### ○ 日대사 "G20-APEC 연계, 한일 협력 기대"(2/18)

-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는 18일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제, "G20에 출석할 수 없는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나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그는 G20와 북핵 문제의 연관성에 대해 "G20의 당면과제는 금융과 경제"라고 재 강조한 뒤 "핵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6자회담을 중심으로 관련국이 노력하고 있으며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2005년의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라. 미·중 관계

### ○ 中 "美 양국관계 훼손" 강력반발(2/19)

- 중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달라이 라마와 면담한 데 대해 "미국이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음.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두차례에 걸쳐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표명했음.
- 중국은 19일 새벽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에 강한 불만과 함께 결연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도를 높인 추가 성명을 발표했음.
- 마 대변인은 추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같은날 의도적으로 달라이 라마와 면담한 것은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인의 민족 감정을 크게 상하게 했을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음.
- 그는 "티베트는 중국 영토이자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어느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 관리를 막론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달라이 라마와 접촉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어느 누구도 달라이 라마를 구실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중국은 성명에서 서방에서 존경받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추가했음. "달라이 라마의 언행은 그가 단순한 종교계 인사가 아니라 종교의 모자를 쓰고 반중 행위와 국가 분열 행위를 하는 정치적 망명자란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음. "미국이 달라이 라마의 방미와 자국 지도자와의 면담을 주선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과 중·미 양국간 3대 공동성명 등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말했음.

- 마 대변인은 또 "미국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이며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면서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그는 "국가주권과 영토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고하다"면서 "달라이 라마를 이용해 중국 내정 간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 마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유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미 관계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미국은 티베트 독립과 반중국 세력의 용인과 지지를 중단하고 중국의 내정 간섭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 마 대변인이 발표한 첫 성명에는 추가 성명에 포함된 미국 측의 행위가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는 내용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비난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음.

### ○ 주미 中대사, 美에 현안 적절처리 촉구(2/17)

-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16일 미국에 대만무기판매,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 저우 대사는 이날 이임을 앞두고 주최한 초대회에서 양국관계를 묻는 언론들의 질문에 미국은 양국간 3개 공동성명 정신 등에 의거해 중국의 핵심적인 이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음. 그는 중·미 관계는 수교 31년간 온갖 역경 속에서도 총체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해야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역설했음.

## 마. 미·러 관계

### ○ <러시아, 중남미 껴안기 가속화..美 긴장> (2/16)

- 러시아의 중남미 껴안기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음. 지난 2008년 11월 베네수엘라에 전략폭격기와 4척의 전함을 보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등 중남미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한 러시아가 올해엔 니카라과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음.
- 16일 러시아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5일 니카라과에서 테러리즘 공동 대응 및 합동 군사 훈련 시행에 합의했음. 러시아의 남미 지역 접근 강화는 2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음.

- 이런 러시아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역내 좌파정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국의 입지가 위축되는 상황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임.
- 또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에 러시아가 경제적,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러시아제 무기 수출 확대, 합동 군사 훈련은 전통적으로 남미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온 미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아직 중남미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공세적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 지역이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장으로 변질하고 오랜만에 화해 분위기를 맞는 러·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모스크바 한 정치 분석가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다고 해도 러시아의 친(親)중남미 정책은 미국을 긴장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음.

## 바. 중·일 관계

### ○ 日, 中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강행땐 제소(2/22)

-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가스전 개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1월 17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때 중국이 동중국해의 시라카바(白樺.중국명 춘샤오<春曉>)에서 가스 생산을 강행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음.
- 시라카바는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임. 양국은 2008년 6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협상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양국 영토의 경계선에 있는 가스전 가운데 시라카바의 개발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아스나로(翌檜.중국명 룽징<龍井>) 남쪽 해역에서는 공동 자원탐사를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음.
- 당시 양국은 시라카바의 경우 출자 비율 등 구체적인 공동개발 방식에 합의할 때까지는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단독으로 굴착 작업에 들어가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은 춘샤오(일본명 시라카바)에 대해 주권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 일본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전제로 일본이 중국법에 따라 합작출자를 통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는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임.

## 사. 기타

### ◎ 佛, 러시아에 장갑차도 판매 추진 프랑스 군함 러시아에 매각(2/17)

- 프랑스의 군수업체 파나르는 10여대의 4인승 수륙양용 장갑차를 판매하기 위해 러시아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음. 파나르는 해당 장갑차가 자신들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가 성능 테스트를 원했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음.
- 프랑스가 러시아에 장갑차를 판매하게 되면 수륙 양용 군함에 이어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사이의 두 번째 무기 판매로 기록될 전망임. 이달 초 프랑스는 2만3천700t급 수륙양용 강습상륙함을 판매하기로 밝힌 바 있음.
- 프랑스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음.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 사이의 첫 번째 무기 거래인 데다 그루지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옛 소련 연방국들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 미국과 여타 나토 회원국 또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음.

### ◎ 中 남아시아 세력확장에 印 긴장(2/16)

- 중국이 남아시아에서 거침없는 기세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벵골만에 위치한 스리랑카 남부의 작은 어촌인 함반토타에 대규모 항구를 건설하고 있음. 또한 아라비아해로 통하는 파키스탄 과다르, 방글라데시 치타공, 미얀마 카육푸에 항구를 건설하고, 인도-중국 사이에 낀 네팔에는 철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마치 인도대륙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로도 불리는 세력 확장은 자타공인 남아시아의 맹주였던 인도에게는 위협임.
- 외무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가안보자문위원회 위원인 칸왈 시발은 뉴욕타임스(NYT)에 "그들이 항구를 건설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 광적인 모습이 보인다"며 "이런 노력은 (남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인도의 영향력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음.
- 이런 변화에 자극을 받은 인도는 최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은 물론 한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활로를 찾고 있음. 또 방글라데시와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관을 제공키로 하는 등 주변국가에 대한 지원도 점차 늘려가고 있음.